



■ 21대 총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11가지 교육공약 보도자료(2020.03.26.)

‘코로나19’보다 센 ‘입시경쟁’ 잡는 ‘21대 총선 교육공약’이 필요합니다!

-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는 물론이고 지구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입시경쟁이 방역망을 뚫고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음.
- ▲ 지난 3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도 입시경쟁으로 인한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3만원이 올랐으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사교육 총 규모는 가파르게 상승하였음.
- ▲ 이런 상황에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20일 앞둔 현 시점에서 총선 공약 중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코로나19’보다 센 ‘입시경쟁’을 잡는 교육공약임.
-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개 영역의 11대 교육공약(△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위한 3대 공약,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3대 공약,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 긴급 4대 공약)’을 21대 총선 과제로 제안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 1영역 :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3대 공약

-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 :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학입시와 채용 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법제화해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 ‘미래형 대입제도’와 ‘상생(相生)대학 네트워크’ :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고교 교육을 혁신하는 미래형 대입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들(상생대학 네트워크)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여, 학생들이 가고 싶은 질 높은 대학들로 만듭니다.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취업과 입시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 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 제 2영역 :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위한 4대 공약

- **일반고 역량강화 및 고교체제 단순화** :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해 모든 고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뿐 아니라 특권학교가 된 수직적 고교체제를 단순화합니다.
- **사교육 받지 않아도 충분한 학교 교육을 위한 법제정** : 학교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학교와 가정의 소통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을 제정합니다.
- **‘학생성장평가제’ 제도화** : 친구와의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성장과 배움을 돕는 ‘학생성장평가제’로 잡자는 교실을 깨웁니다.
- **수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 수포자 예방 및 수학교육 진흥법을 제정해 수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을 실현합니다.

■ **제 3영역 : 비교육적/불법적 사교육 문제 해결 긴급 4대 공약**

- **사교육 소비자 보호법 제정 등** : 사교육 현장의 불법·비교육적 행태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합니다.
- **학원 휴일 휴무제 등** :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 아이들의 쉽고 건강을 보장합니다.
-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 비교육적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홍보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제정** : 영유아 시기에 한글·영어 조기 교육 및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아이들이 고통 받지 않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 쉬을 누리도록 ‘영유아 인권법’을 만듭니다.

- ▲ 위의 11대 공약 중 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19대 대선 공약 혹은 국정과제였지만 20대 국회에서 완결되지 못하거나 시도조차 되지 않았음. 또한 이 중 몇 가지는 이미 일부 정당의 21대 총선 주요 공약에 포함되기도 하였음.
- ▲ 따라서 21대 국회에 입성하려는 정당과 후보들은 상기 공약을 국민 앞에 내걸고 21대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멈추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함.
- ▲ 더불어 유권자인 국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입시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내거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20일 앞둔 현 시점에서 총선 공약 중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코로나19’보다 센 ‘입시경쟁’을 잡는 교육공약임을 총선을 치르는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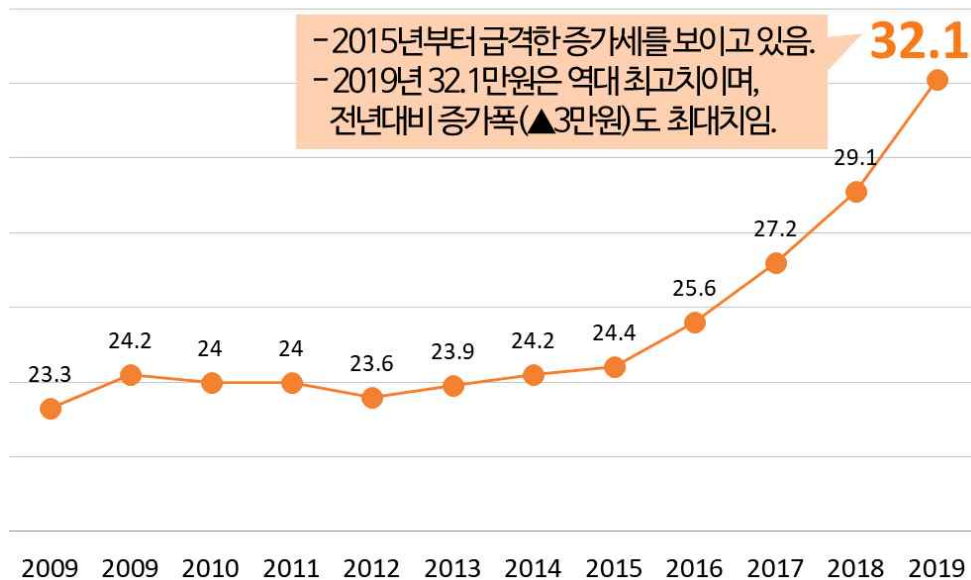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는 물론이고 지구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입시경쟁이 방역막을 뚫고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육부가 3차 개학연기를 발표하는 상황이지만 학원가로 향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 휴원을 권고 있지만 현실은 냉담합니다. 초등학생은 개학 이후 혹은 중학교

에 가서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 때문에, 중학생은 영재학교·자사고·특목고에 가기 위한 고입 경쟁에 학원으로 내몰립니다. 고등학생이 코로나19 국면에 학원에 나가는 것은 당연시 여겨지는 풍토입니다. 특히 당장 올해 대학입시를 치르는 고3의 경우는 입시라는 현실 앞에서 안전은 2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결국 서열이 높은 대학에 들어가야 소위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안전보다 입시를 선택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언론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개학을 연기한 상황에서 기사의 대부분은 대학입시 일정을 연기할 것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개학이 다시 확산세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임에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여론의 관심을 더 받고 있으니 대한민국에서 대학입시는 전염병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3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1만원으로 전년대비 3만원이 오른 역대급 폭증이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사교육 총 규모는 1조 5천억원(+7.8%)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습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74.8%로 전년대비 1.9%p 상승하였으며,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도 초중고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그림 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연도별 추이

(자료: 교육부·통계청, 연도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단위: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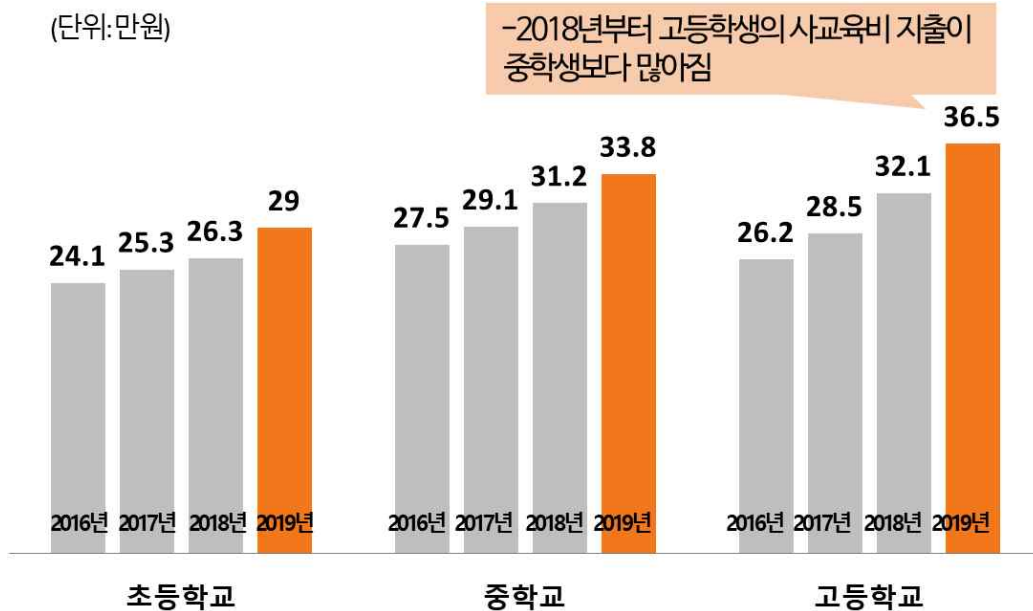


특히 초중고 학교급 중 고교 사교육비가 36.5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가폭도 전년대비 4.4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대입경쟁이 얼마나 과도한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지표입니다. 사교육비의 폭증은 가계부담으로 이어지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게다가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이 통계청이 그간 조사해온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명문대를 나와야 취업에서 유리하다’가 매년 1순위였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해 사교육비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적비관 자살이나 자해 비율도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만 이 고통이 외면당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4.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20일 앞둔 현 시점에서 총선 공약 중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19’보다 센 ‘입시경쟁’을 잡는 교육공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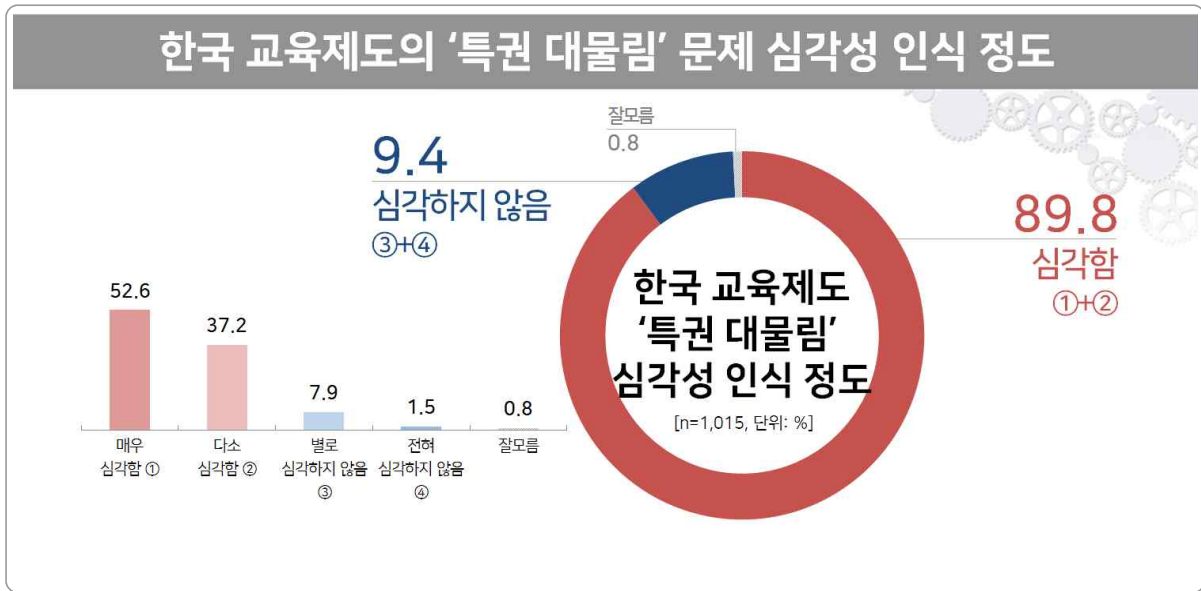
[그림 2]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2016년~2019년)

(자료: 교육부·통계청, 연도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처방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 대학 서열화와 채용에서의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는 공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열이 높은 대학에 가야 채용에서 유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이 경쟁에 다수의 국민이 뛰어들지만 정작 그 이득은 소수의 특권 계층이 모두 가져가는 형국입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학 서열과 채용의 불공정을 해소하면서도 특권 계층이 누리는 특혜의 민낯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특권층에게 쏠린 기득권을 국민 다수가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입시와 채용 영역에서 특권 대물림 방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림 3] 한국 교육제도의 '특권 대물림' 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



두 번째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한 학교 교육 환경은 물론이고 지식암기 중심의 구태를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목표로하는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약'이 필요합니다. 사교육 유무, 특히 사교육 투자 비용에 따라 대학과 직업이 달라진다면 사교육 경쟁도 풀 수 없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한 학교 교육을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선다형 시험 점수와 등수로 학생을 평가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생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체제의 문제는 초중학생까지 고입경쟁으로 내모는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모두가 가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로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포자 문제 또한 학교 교육의 걱정이 된지 오래입니다. 수학교육을 혁신해 더 이상 수포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 필요합니다. 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선행학습을 비롯한 과도한 학습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특히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학습 사교육, 초등학생에게 고등 수학과 수능 영어 문제를 풀리는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은 법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벌, 폭언, 성범죄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교육 현장의 불법·비교육적인 행태와 월화수목금금금으로 휴식 없는 사교육을 통한 학습 노동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법과 제도의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21대 총선에 나서는 정당 및 후보자는 물론이고 유권자인 국민 앞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3개 영역의 11대 교육공약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상세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 제 1영역 :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3대 공약

-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 :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학입시와 채용 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법제화해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 ‘미래형 대입제도’와 ‘상생(相生)대학 네트워크’ :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고교 교육을 혁신하는 미래형 대입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들(상생대학 네트워크)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여, 학생들이 가고 싶은 질 높은 대학들로 만듭니다.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취업과 입시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 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 제 2영역 :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위한 4대 공약

- 일반고 역량강화 및 고교체제 단순화 :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해 모든 고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뿐 아니라 특권학교가 된 수직적 고교체제를 단순화합니다.
- 사교육 받지 않아도 충분한 학교 교육을 위한 법제정 : 학교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학교와 가정의 소통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을 제정합니다.
- ‘학생성장평가제’ 제도화 : 친구와의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성장과 배움을 돕는 ‘학생성장평가제’로 잠자는 교실을 깨웁니다.
- 수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 수포자 예방 및 수학교육 진흥법을 제정해 수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을 실현합니다.

■ 제 3영역 : 비교육적/불법적 사교육 문제 해결 긴급 4대 공약

- 사교육 소비자 보호법 제정 등 : 사교육 현장의 불법·비교육적 행태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합니다.
- 학원 휴일 휴무제 등 :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 아이들의 쉼과 건강을 보장합니다.
-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 비교육적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홍보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제정 : 영유아 시기에 한글·영어 조기 교육 및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아이들이 고통 받지 않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 쉼을 누리도록 ‘영유아 인권법’을 만듭니다.

위의 11대 공약 중 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19대 대선 공약 혹은 국정과제였지만 20대 국회에서 완결되지 못하거나 시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중 몇 가지는 이미 일부 정당의 20대 총선 주요 공약에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입시경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대학 서열화 문제를 위한 공약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정당에서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내세운 국민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미처 약속하지 못한 공약들은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 속에 반영하는 보완 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21대 국회에 입성하려는 정당과 후보들은 상기 공약을 국민 앞에 내걸고 21대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멈추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더불어 유권자인 국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입시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내거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0. 3. 2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분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